

배포 일시	2023. 1. 30.(월)		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	책임자	과 장 김유진 (044-201-4598)
	시설안전과	담당자	사무관 송하윤 (044-201-3587)
보도일시	2023년 1월 3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30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제5차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」 고시 -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‘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(2023~2027)’을 1월 31일(화) 고시*할 예정이다.
 - *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
 - ** 기본계획(국토부장관)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‘중기관리계획’, 매년 ‘시설물 관리계획’을 수립·시행

- ‘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(2023~2027)’은 시설물 노후화, 기후변화,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였다.
 - 계획수립을 위해 9개월 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, 산·학·연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, 4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, 공청회(‘22.11.30)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(~‘22.12.9)을 통해,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.

- 이번 기본계획은 ‘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’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, 제도·기술·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,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[1] [정책·제도]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지원을 강화

□ 노후화된 경로당,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빈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시설물안전법”)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한다.

○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지자체·관리주체 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하여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.

○ 또한,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하였으나, 안전등급 D·E로 판정*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·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.

* (A등급) 최상상태, (B) 경미한 손상, (C) 보통, (D) 주부재 노후화, (E) 주부재 심각한 결함

** (정기안전점검) 육안점검, (정밀안전점검) 장비사용, (정밀안전진단) 구조안전성 평가, (성능평가) 시설물의 안전성, 내구성,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○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(안전성 검토)·성능평가(안전성·내구성·사용성 검토)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*하여 두 과업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.

* (예) (현행) 성능평가(5년 주기) 다음 해에 정밀안전진단(A등급, 6년 주기) 실시 사례 발생
→ (개선)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성능평가와 같도록 조정하여 동시 실시 후 과업 결과를 연계

【 안전취약 시설물 예 】



* 소규모 교량



* 공동주택 용벽



*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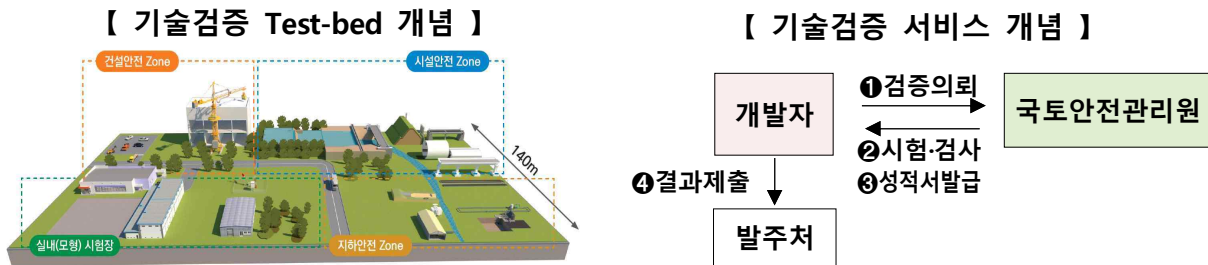
[2] [기술] 첨단기술 도입 토대를 마련하여 시설관리를 효율화

□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성·정확성을 제고하고,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성과를 가시화한다.

○ 이를 위해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·로봇·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제정비한다.

○ 또한,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* 구축도 추진한다.

* 국토안전관리원에 (가칭)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술실증 센터를 설치하고, 시험부지·장비 구축



[3] [산업] 민간의 자생력을 토대로 안전진단 역량 강화

□ 민간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공공분야의 지원과 함께 역량 있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목표이다.

○ 이를 위해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(교량, 터널 등 현재 148개)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.

○ 또한,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저가발주·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.

[4] [기후변화] 사후관리 ⇨ 능동적·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난 예방

- 태풍·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주체의 선제적·효율적 대응을 지원하고,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한다.
 - 이를 위하여, 하천교량·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 등을 정비하고, 시설물 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하여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·시설개선을 지원한다.
 - 또한, 지진에 대비하여 시설물들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각 개별 시설물(교량, 터널, 건축물 등)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.
 -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 실시를 추진하여 대국민 의식도 제고한다.
-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”임을 강조하고,
 - “이번 「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,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한편, 「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뉴스·소식/공지사항에서 1월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.

붙임

제5차 계획의 비전 및 목표

비전

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

목표

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는 시설물

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시설물

미래 산업·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시설물

분야

현재 ⇒ 변화 모습

추진과제

정책·제도

규제·처벌 위주

· 실태점검 대상 확대
· 처벌규정 강화



지원강화·사각해소

· 취약대상 집중관리
· 관리수준 향상 지원

- ① 관리사각지대 해소
- ② 안전진단 내실화
- ③ 안전조치 강화
- ④ 주체별 지원 강화

기술

첨단기술 도입 기반구축에 주력

· 인력경험 의존 관찰
· 시설안전 DB구축



첨단기술 확대 성과 창출 및 효율화

· 첨단기술 활용 분석
· 빅데이터 산업 파생

- ① 스마트 안전진단
- ② BIM 활용 지원
- ③ 시설물 원격 계측관리
- ④ 빅데이터 활용
- ⑤ 첨단기술 개발 지원

산업

양적 성장을 통한 자생력 토대 구축

· 국내시장 규모 확대
· 인력 중심 산업



질적 성숙을 통한 안전진단 역량 강화

· 기술역량 강화
· 고부가가치 산업

- ① 맞춤형 역량 강화
- ② 전문인력 양성
- ③ 대가기준 고도화
- ④ 업계 해외진출 지원
- ⑤ 공정경쟁 환경 조성

기후 변화

수동적 사후 관리

· 보이는 위험 조치
· 사후 복구 투자



능동적·선제적 대응

· 잠재위험 발굴·개선
· 사전 예방 투자

- ① 기후변화 대응
- ② 지진대비 강화
- ③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